

<2016 사회복지학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16.3.19. 시행)>

[1] 행정가치 중 본질적 가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정치적 자유
- ② 가치의 평등한 배분
- ③ 민주적 의사결정
- ④ 사회적 형평

정답> ③

해설> ③ [X] 민주적 의사결정(민주성)은 수단적 가치로 분류된다.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본질적 가치	수단적 가치
· ‘행정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 · 공익, 자유, 형평, 복지, 평등, 정의 등	· ‘궁극적 목표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들’ · 합리성, 능률성과 효과성, 민주성, 책임성, 합법성, 투명성, (중립성, 가외성) 등

▶ 2016 비선행정학 p.210

[2]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게 되는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이 아닌 것은?

- ① 불충분한 자원
- ②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 ③ 집행 업무의 단순성과 정형화
- ④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정답> ③

해설> 흔히 일선관료는 단순한 집행업무만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쉽지만, 립스키(Lipsky, 1976)는 일선관료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매우 복잡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본다. 고객과 접촉하는 일선관료가 실질적으로 공공정책을 결정한다는 상향적 정책집행접근법을 중시한다. 특히 복지행정에서는 일선관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고 비판하였다.

③ [X] 일선행정관료들이 처한 업무상황은 일률적으로 정형화시키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

일선행정관료의 작업환경
<p>(1) 자원의 부족 과중한 업무량에 비하여 제공되는 인적·물적 자원이나 시간적·기술적 자원은 만성적으로 부족하다.</p> <p>(2)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 존재한다.</p>

(3) 기대의 모호

일선관료의 집행성과에 대한 기대는 모호하고 대립되며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

(4) 행정수요의 증대

일선 행정수요가 공급능력을 앞서간다(→ 사기저하).

(5) 평가기준의 결여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결여되어 있고, 고객집단도 비자발적이어서 관료들의 성과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으며, 효과적인 통제체제도 없다.

(6) 기 타

부서의 목표가 애매하거나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다. 고객들은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이다.

▶ 2016 비전행정학 p.417

[3] 집단적 의사결정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은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집단을 활용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 ②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지명반론자 기법(devil's advocate method)이 성공하려면 반론자들이 고의적으로 본래 대안의 단점과 약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여야 한다.
- ④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technique)은 집단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X] 명목집단 기법(nominal group technique)은 집단적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해결방안에 대해 구상을 하고, 그에 대해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을 한 다음 해결방안에 대해 표결을 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토론이 비조직적으로 방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집단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 2016 비전행정학 p.377

[4]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능급이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다.
- ② 실적급(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의 근무실적과 보수를 연결시킨 것이다.
- ③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④ 연공급(근속급)은 근속연수와 같은 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이다.

정답> ①

해설> ① [X]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는 직능급이 아니라 ‘직무급’이다. 직능급은 능력의 범위를 한정하여 직무별 능력을 기초로 하는 보수를 결정한다.

<보수체계의 결정원칙>

기준(보수제도)	보수결정 기준	기초 원리	보수의 원칙
생계비(생활급)	생계비	보수의 하한선	생활보장의 원칙
연공(연공급)	근무연수	동일 근속 동일 보수	
직무(직무급)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투입)	동일 직무 동일 보수(노동의 가치)	노동대가의 원칙
능력(직능급)	직무수행능력(잠재적 기여 가능성)	동일 능력 동일 보수(노동력의 가치)	
성과(성과급)	근무실적(현실화된 기여도, 산출)	동일 성과 동일 보수	

▶ 2016 비전행정학 p.899

[5] 정책집행연구의 하향식 접근에서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조건이 아닌 것은?

- 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② 일선공무원의 재량과 자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 ③ 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 주요 입법가, 행정부의 장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 ④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② [X] 일선공무원의 재량과 자율을 중시하는 것은 상향식 접근이다.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조건(Sabatier & Mazmanian)

- ①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기술적 타당성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써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인과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 ② 법령이 정확한 정책지침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상집단의 순응을 극대화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명확한 정책 목표, 명료한 목표 간 우선순위, 충분한 재정적 지원, 적절한 정책집행기관 선정, 집행기관 간 조직적 통합, 목표달성에 적합한 집행기관의 의사결정 규칙,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등이 포함된다.
- ③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집행을 담당해야 한다.
- ④ 결정된 정책에 대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 ⑤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집행과정 동안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 2016 비전행정학 p.414

[6]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조직구성원들은 한편으로 공급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인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 ② 환경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단기적 전략과 교정적·사후적 통제에 치중한다.
- ③ 목표관리제(MBO)와 달리 TQM의 관심은 외향적이어서 고객의 필요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 ④ 하급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과 분권화를 촉구하지만 계층제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정답> ②

해설> 총체적 품질관리(TQM)는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제1차적 목표로 삼고 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 하에 조직의 과정·절차·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총체적 성과향상 전략인 동시에 고객지향적인 총체적인 품질관리철학'을 의미한다.

② [X] 총체적 품질관리(TQM)는 장기적 전략과 예방적·사전적 통제에 치중한다.

▶ 2016 비전행정학 p.1181

[7] 계급제와 비교할 때, 직위분류제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업무의 전문화로 인하여 상위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이 쉽다.
- ②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저해되기 쉽다.
- ③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을 적용하기 쉽다.
- ④ 각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교육훈련수요를 파악하기 쉽다.

정답> ①

해설> ① [X] 직위분류제는 업무의 전문화로 인하여 상위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 2016 비전행정학 p.811

[8]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와 그 목적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참여예산제도 -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
- ② 예산의 이용과 전용 -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 ③ 준예산제도 - 국가 재정활동의 단절 방지
- ④ 특별회계제도 - 재정운영주체의 자율성 확보

정답> ①

해설> ① [X]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특히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나 성과 관리보다는 예산주권의 극대화나 민주성을 중요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2016 비전행정학 p.1320

[9]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 ② 주민투표제,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고유사무와 관련된 영역에 한해 법령의 근거 없이 스스로 세목을 개발하고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④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X]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근거 없이 스스로 세목을 개발하고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

▶ 2016 비전행정학 p.1299

[10] 우리나라의 예산·회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과 같은 예산개혁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②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③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는 대상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③ [X]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아니라 ‘총사업비(관리)제도’이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인 사전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타부문과의 연계성 등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 2016 비전행정학 p.1093, 1063

[11]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론(신행정학)은 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행정학의 실천성과 적실성, 가치문제를 강조하였다.

②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으로 연구하며, 전통적인 관료제를 비판하였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으로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④ 뉴거버넌스론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신뢰와 협동을 강조한다.

정답> ③

해설> ③ [X]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으로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한 것은 신공공서비스론(NPS)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NPM)이다. 신공공서비스론(NPS)은 시민중심적 · 사회공동체중심적 · 서비스중심적 접근방법으로써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반론이자 일종의 민주적 거버넌스로 제시된 것이다.

▶ 2016 비전행정학 p.130

[12] 평정자가 평정표(평정서)에 나열된 평정요소에 대한 설명 또는 질문을 보고 피평정자에게 해당되는 것을 골라 표시를 하는 평정방법은?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

② 체크리스트법

③ 산출기록법

④ 직무기준법

정답> ②

해설> ② [O] 평정자가 평정표에 나열된 평정요소에 대한 설명 또는 질문을 보고, 피평정자에게 해당되는 것을 골라 표시하는 방법을 체크리스트법(check list, 사실표지법, Probst 평정법)이라고 한다. 체크리스트법에서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특성이나 직무수행을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보고할 따름이다.

▶ 2016 비전행정학 p.861

[13]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좋은 거버넌스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 ②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위하여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 ③ 정부와 시민단체의 지나친 유착은 시민단체의 정체성 문제를 야기한다.
- ④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균형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정답> ②

해설> ② 우리나라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016 비전행정학 p.265

[14] 정책수단(policy tool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기업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샐러몬(L. M. Salamon)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간접적 수단인 직접적 수단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 ③ 행정지도에 대하여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 ④ 규제는 정책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정답> ②

해설> ② [X] 샐러몬(L. M. Salamon)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직접적 수단’이 간접적 수단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 ① [O] 공기업은 직접적 정책수단 중 하나으로써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 하한다.
- ③ [O] 행정지도는 직접적인 법규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 ④ [O] 규제는 진보와 보수 등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정책수단이다. 진보진영은 규제를 찬성하지만, 보수진영은 규제를 반대할 수 있다.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 수단과 효과(Salamon)>

직접성	행정 수단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관리 가능성	정당성 (정치적 지지)
-----	-------	-----	-----	-----	--------	--------------

낮음	손해책임법, 보조금, 대출보증, 정부출자기업, 바우처	낮음	높음	낮음	낮음	높음
중간	조세지출(조세감면), 계약, 사회적 규제, 벌금	낮음/중간	중간	낮음	낮음	높음
높음	보험, 직접 대부(대출), 경제적 규제, 공공 정보 제공, 공기업, 정부 소비(직접 시행)	높음	중간	높음	높음	낮음

▶ 2016 비전행정학 p.283 / 2016 비전행정학 Sub-Note p.38

[15] 애로우(K. J. Arrow)가 제시한 바람직한 집합적 의사결정방법의 기본조건이 아닌 것은?

- ① 집단의 선택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 ②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③ 어느 누구도 집합적인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④ 두 대안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 순위는 두 대안뿐 아니라 다른 제3의 대안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X] 두 대안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 순위는 오직 그 두 대안 자체에 대한 선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애로우(Arrow)의 불가능성 정리	
(1) 의 의	
① 불가능성 정리는 ‘어떠한 사회적(집단적) 의사결정도 민주적(비독재적)인 동시에 효율적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개인의 선택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선택의 다섯 가지 전제조건(가능성 정리의 공준)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집단적 선택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다섯 가지 가능성의 조건	
① 파레토의 원리 : 모두가 A보다 B를 원하면 사회적 선택도 B가 되어야 한다(사회적 선호체계가 개별 구성원의 선호체계를 존중해야 한다).	
② 이행성(합리성)의 원리 : $A > B$ 이고 $B > C$ 이면 $A > C$ 가 되어야 한다(선호가 단봉이러야 한다).	
③ 독립성의 원리 : 상관 없는 선택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결정되어야 한다(대안 간에 서로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④ 비독재성의 원리 : 한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므로) 사람에 의한 독재적 의사결정은 안 된다.	
⑤ 선호의 비제한성 원리 : 개인은 어떠한 선호체계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자신의 선호가 제한 없이 표출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합리성의 원리	파레토의 원리
	이행성의 원리
	독립성의 원리
민주성의 원리	비독재성의 원리
	선호의 비제한성 원리

▶ 2016 비전행정학 p.114

[16]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슬로우(A. H. Maslow)의 욕구계층론에 대하여는 각 욕구단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 ② 앨더퍼(C. P. Alderfer)는 ERG이론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 ③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 대하여는 개인의 욕구 차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 ④ 맥클리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개인의 욕구를 성취욕구, 친교욕구, 권력욕구로 분류하고 권력욕구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정답> ④

해설> ④ 맥클리랜드(D. McClelland)는 성취동기이론에서 개인의 욕구를 성취욕구, 친교욕구, 권력욕구로 분류하고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 2016 비전행정학 p.518

[17]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부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사용하고 단년도 중심의 예산이다.
- ② 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사업의 묶음이다.
- ③ 예산 운용의 초점을 투입중심보다는 성과중심에 둔다.
- ④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은 품목별 예산체계의 ‘항-세항-세세항’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해설> ① [X] 세부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사용하고 단년도 중심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은 전통적인 품목별예산(LIBS)이나 성과주의예산(PBS)이다. 프로그램예산(program budget)은 ‘프로그램(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프로그램이란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사업(activity/project)의 묶음을 말한다. 프로그램 예산(program budget)은 기존의 품목별(항목별) 분류체계를 탈피하여 성과를 지향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예산(program budget)은 성과중심의 예산운형을 위해 프로그램(정책) 중심의 하향식 예산방식으로 장기사업 등 다년도 중심의 예산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우리나라 세출예산과목 분류>

기본분류 ¹⁾	입법과목				행정과목		
	소관	장	관	항	세항	목 ²⁾	세목
프로그램별 분류		분야	부문	정책사업 (프로그램)	단위사업	편성비목	통계비목

1) 국가재정법상의 분류에 해당한다.

2) 인건비, 물건비 등은 목에 해당하고, 이를 세분화한 봉급 및 수당, 운영비 등은 세목에 해당한다.

▶ 2016 비전행정학 p.1001

[18]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합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다.

- ②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 ③ 질의민원은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 ④ 건의민원은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정답> ①

해설> ①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은 '다수인관련민원'이다. 복합민원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민원의 종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p>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p> <p>(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p> <p>(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p> <p>(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p> <p>(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p> <p>(5)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p> <p>(6) 복합민원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p> <p>(7) 다수인관련민원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p>

▶ 2016 비전행정학 p.1157 / 2016 비전90 족집게 핵심단기특강 p.252

[19]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② 특정한 지방공공사무를 보다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할구역과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설립의 일반적 이유이다.
-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난립과 구역·조직·재무 등 지방제도의 복잡성과 혼란을 완화할 수 있다.
-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처리 이외에 공기업의 경영을 위해 설립되기도 한다.

정답> ③

해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구역·기능·조직 등이 특수하고 그 존재가 보편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자치행정상의 정책적 관점에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거나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또는 행정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자치단체이다.

③ [X]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난립과 구역·조직·재무 등 지방제도의 복잡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과 한계>

필요성	한 계
① 특정 공공사무에 대한 주민 편의 도모 및 효율적 공급을 위한 관할 구역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난립으로 지방제도의 복잡성과 혼란 초래
② 규모의 경제를 실현	② 행정기능 간의 종합·조정을 저해하고 할거주의 조장
③ 재정적·법적 제약 및 채무한계의 극복	③ 책임소재 불분명 및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통제력 약화
④ 지방정치로부터의 분리 및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	④ 특수 기능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특수전문가나 이해당사자의 영향을 크게 받음
⑤ 행정사무단체 이외에 기업경영단체(공기업)의 설립	

▶ 2016 비전행정학 p.1252, 1329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②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③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다른 법률에서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되었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연장 없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O]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법 제4조 ②항).

② [X]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일정기간 거주하는 등록된 외국인 등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5조 ②항).

③ [X]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9조).

④ [X]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11조).

▶ 2016 비전행정학 p.719